

전남도, '환경관리권 시·군 위임' 난항

도 "전문·기술력 부족... 관리 감독 부실 민원만 야기" 시·군 "재난관리 책임은 관할 지자체... 2종까지 넘겨야"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환경관리권의 일선 시·군 위임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도 담당 실과에서는 시·군의 전문성·기술력·단속 의지 미약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군은 더 많은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전남도와 일선 시·군과의 갈등 양상으로 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최종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공약한 3종 사업장 환경관리권의 시·군 위임과 관련된 여수국가산단 내 3종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위임, 국가산업단지 내 3종 대기·폐수배출업소 위임, 산업단지 내의

구분없이 3종 대기·폐수배출업소 위임 등 3가지 안을 마련해 19개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3종 사업장이란 폐수발생 일일 200~700t 미만, 연간 대기오염발생물질량 10~20t 미만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전남에는 모두 126곳이 있다. 4종(폐수 50~200t 미만, 대기 2~10t 미만) 981곳, 5종(폐수 50t 미만, 대기 2t 미만) 3082곳 등은 이미 시·군에 위임돼 있으며, 3종은 그동안 1종(폐수 2000t, 대기 연간 80t 이상) 107곳, 2종(폐수 700~2000t 미만, 대기 20t 이상) 116곳과 함께 전남도가 관리·감독해왔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여수·광양·순천 등

대규모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동부지역에서 3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권 위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이에 이 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3종 사업장의 위임을 약속하자 전남도가 부러부러 위임 대책을 논의중이다. 문제는 전남도가 일선 시·군의 단속 능력 및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폐수 및 대기 관련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시·군은 전체 대상업소의 6.8%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는 20%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 감독이 부실해지면서 민원만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환경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수 등은 사건·사고 발생 시 재난

관리 책임기관은 관할 지자체인데, 환경관리권이 전남도에 있어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전남도가 일일이 지역 사업장까지 관리·감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전남도가 마련한 3가지 방안은 위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하고 있다. 광양시 등은 오히려 기타 의견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산업단지 외 2종 사업장까지 시·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수시 관계자는 "권한을 누가 갖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관리 및 재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효율적인 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회, 시민단체가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정화기자 chkim@kwangju.co.kr

지방세, 광주 13억·전남 12억 징수 않고 방치

감사원 '지방세 부과 실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른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4월 안전행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서구청 등은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28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40명에 대해 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등 전남 3개 자치단체도 8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11명에 대해 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지방세기본법)은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감사원은 광주와 경기, 인천, 부산 등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

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도 한 기업이 타기업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지주사로의 전환을 신고, 취득세 104억원을 면세받고 1년 후 바로 회사를 해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광주시와 전남도 등 16개 시·도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이 취득세를 면제·감면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데도 감면액 61억원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12개 법인에 2억여원, 전남도가 35개 법인에 8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세금 부과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북한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전격 제의했다. /연합뉴스

정부,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 ... 추석 이산상봉도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논의도 가능"

정부가 11일 북한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전격 제의하면서 남북 해빙모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김규현(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회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8월19일을 회담 일자로 일단 제시했으며, 북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요구해 온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정 의제는 안 된다고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측이 그런 의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접촉에서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리 논의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접촉

에서 북한 선수주 및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할 방침이다.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수용해 19일에 접촉이 이뤄지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상봉 대상자 선정 및 명단 교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말~10월 초 상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합의 후 예전에는 최소 두 달 정도 소요됐는데 압축해서 하면 한 달에서 6주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母子) 보금 지원 사업에 1330만달러(한화 약 137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백범 주치의 아들 등 유공자 후손 16명 국적 취득

법무부는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1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윌리엄 린튼 선생의 증손자, 양기탁 선생의 외증손자 등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6명이 참석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의사인 유진동 선생은 1940년부터 광복군사령부 군의처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냈다. 윌리엄 린튼 선생은 1912년 선교사로

입국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데 공헌했고, 3·1운동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1936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강제추방당했으나 1956년 재입국해 대전 대학을 설립하는 등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린튼 선생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미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 허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신임 대법관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정수(62·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11일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어 권 차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권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정부는 또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母子) 보금 지원 사업에 1330만달러(한화 약 137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일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양 대법원장은 법률지식, 판단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에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함께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쳐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매선 30여대)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 울베라, 세이지, 에너젯 복합치료
② 여드름 레이저 : 스쿠스원, 아자울, 브이엠, 프락셀
③ 케모데모 레이저 : 켈름팩스, 디오아우드레드
④ 피부 미백 : 무데나스원 엑셀V, 켈름팩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 프랙셀유입, 울트라펄스임팩트, 프랙토라 인트라세, 프락셀 세나
⑥ 모공·엔티지, 프락셀5종
⑦ 비만 :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아병원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수술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초기 아찔 및 번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40611-증-59153호